



‘시총 100조’ 현대차, 피지컬 AI 타고 질주

로보틱스·자율주행 ‘양대 축’
미래성장 동력 공유에 신뢰 상승
장중 49만6500원, 시총 100조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사상 처음으로 시
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아틀라스와 스팟
등의 로봇을 공개하며 로보틱스와 자율
주행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은 ‘피지컬
AI’ 전략을 공유했다. 뚜렷한 미래 성장
동력을 공유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장 초반 49만6500원까지 오르며 한때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이어 시가 총액 200조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피지컬 AI 전
략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
난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차세대 휴
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AI 로
보틱스 전략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 HM
GMA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전
략을 제시했다. 아틀라스는 글로벌 시
장에서 주목받았으며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의 ‘최고의 로봇’ 상을 수상
했다.

또 로보틱스와 함께 피지컬 AI의 한
축을 이루는 자율주행차 분야의 경쟁력
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합작법



생산자물가 낙달째 ‘상승’

반도체 가격과 농림수산물 물가 오름세에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림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21.76(2020년=100 기준)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는 낙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1.2%를 기록했다.

/뉴시스

인 모셔낼은 올해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수
준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준비
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과 로보택시 기술 주
도권에 나선다는 점에서 세계 테크 기업
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테크 기업 출신
의 글로벌 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인 오토파일럿 개발에 참여했고 엔
비디아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
문 부사장을 지낸 박민우 박사를 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지난해 말 사임한 송창현 AV

P 본부장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에는 테슬라에서 자율주
행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
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한 밀란 코박을
현대차그룹의 자문역으로 선임했다.

이처럼 미래 성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차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다. 덕분
에 지난해 미국 관세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AI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미국 내 ‘로봇 메타
플랫폼 응용 센터’를 개소한다. 로봇의
실전 투입 전 학습과 검증을 전담하는
일종의 ‘로봇 훈련소’를 구축해 스마트
팩토리의 지능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의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해 2028년부터 미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부
품 분류 공정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2030년부터 고난도 부품 조립도 맡긴다
는 목표를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관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과 시총 증
대를 통해 확보한 자본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과 SDV, 친환경차, 로보틱스 등 미
래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에 공격
적으로 나설 수 있게됐다”며 “올해 하반
기 자율주행 로드맵과 신흥시장 현지화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HMM 인수전 앞두고 스타키스트 가치 평가 동원, 실탄점검 나서

동원그룹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의 기업가치 평가에 착수했다. 시장에
서는 이를 두고 향후 대규모 인수합병
(M&A)을 염두에 둔 사전 자금 조달 점
검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매
각 절차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전에 대비한 포
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미국
100%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
뢰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가
능 규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2008년 인
수한 글로벌 참치 브랜드로 그룹 내에서
도 대표적인 수익 창출 자산으로 꼽힌
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8872억 원, 영업이익은 1150억 원을 기
록했다. 과거 동원산업 사업 부문을 이
끌었던 재무통 민은홍 대표는 지난해 2
월 사장 승진과 함께 스타키스트 최고경
영자(CEO)를 맡고 있다.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평가 의뢰 금융기관서 자금조달 규모도 검토 2조 지분 동원F&B 이전 시나리오

시장에서는 동원산업이 스타키스트
지분 전량을 약 2조 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룹 계열사인 동원F&B로 넘기는 내
부 거래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동원산업은 지분 이전 대가로 2조
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향후 HMM 인수를 위한 실탄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HMM 매각 절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흐름과 맞물리며 힘을 얻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HMM 주
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실사에 재착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해양
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지분은 각각
35% 안팎으로, 경영권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최소 6조~7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필
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원그룹은 이미 지난해 말 그룹 차
원에서 HMM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
F)를 꾸린 바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산업은 그룹 지주사로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복수의 M&A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스타키스트의 가치산
정을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받아볼 계
획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 가능한 규
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스타키스트 매각 여부나 구
체적인 거래 구조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
다”고 선을 그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특고·프리랜서도 퇴직금 보장 ‘근로자 추정제’ 추진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노동부, 오는 5월1일 국회통과 목표
형식상 개인사업자, 실질 근로자 보호
사업주가 노동자성 입증책임져야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
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
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
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
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
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
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
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
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
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
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
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
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
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
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
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
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
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

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
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
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
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
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
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
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
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
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소한의 삶 보장”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대
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아
▲이 대통령 “국민 여론, ‘원전 추가’ 압도적…이
념 의제화 말고 모여서 논쟁해야” /사진 뉴시스

▲당정, 행정통합 보고회 개최…“분권형 자치정
부 모델 지향해야”
▲與 김용민 “중수청 이원화 기형적 제도…수사
사법관, 법원서도 반발”

▲국민의힘, 청와대 앞 규탄대회… 송언석 “쌍특
검 반드시 수용해야”
▲국힘 소장과 ‘대안과 미래’ “장동혁 단식투쟁
적극 지지…당 통합 저해 언행 중단돼야”